

『희망과대안』 지역조직에 대한 입장(안)

2010. 1. 6 / 1차수정

* 이 문서는 지역에서 희망과대안 모임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큰 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과 관련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1.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2. 'oo 희망과대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희망과대안은 지역모임 등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심의사항은 별지)
3. 사업진행시 타 희망과대안 조직과 충분히 협의 및 소통해야 한다.

<별지>

지역조직 관련 심의사항 (안)

- ① 대안적 정책 및 담론에 대한 메시지 그룹의 역할, 민주주의 불균형 해소 및 좋은정치세력 육성, 시민사회내 소통, 정치권과 시민사회 소통 이라는 활동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
- ② 대외적인 비정당-비정파성 견지 여부
(지역별 특성 고려 회원은 정당-정파조직 가입 가능하더라도, 주요임원은 불가)
- ③ 지역사회의 포괄성(지역원로와 지역시민단체인사들을 포괄) 여부
- ④ 각 지역모임의 대표와 책임자(이상 비정당, 비출마) 1~2명은 중앙(서울) 희망과대안 가입원칙 이행 여부
- ⑤ 시민정치운동과 연합정치 담론보고서(12.21 발표) 동의 여부
- ⑥ 재정운영의 독립성 견지 여부

- # 첨부 : 1. 희망과대안 창립선언문 (10.19)
2. 시민정치운동과 연합정치 담론보고서 (12.21) / (생략)

<첨부1> 『희망과 대안』 창립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한국 사회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서민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친서민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비정규직 문제, 용산참사 문제, 쌍용차 문제 등을 다루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에 비해 여전히 정부는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개발이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우리 사회의 가치인 생태적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임은 물론 특정 사업자를 빼고는 국가경제에 가져다 줄 이득도 부풀려져 있기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공론의 공간에 이견을 내세우는 사람과 단체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모자라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국가가 나서서 국민 개인을 고소하는 등 이견과 반대를 말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집요하고도 웅졸하기까지 한 방식을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회와 지방정치 어디서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당 중심의 정치라고 할 만큼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참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일시적 균형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촛불시위와 두 대통령 서거 당시 드러난 국민들의 추모열기가 그것입니다.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수적 열세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또한 개별화되고 관성화된 운동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 누군가, 그 어디에선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쌓은 성과가 훼손되고 심지어는 과거로 돌려질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정치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반대나 지지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심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대, 아니 이 시간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태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시기는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을 우리 사회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사회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북돋우고 일깨우는 작업을 사심 없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위해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패는 정부와 여당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핍박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소통의 정치로 변화해야 합니다. 야당은 분열의 정치, 대안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치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가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깃발이 되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풀뿌리 운동의 성

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력이 움트도록 돕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킴으로써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 내고자 『희망과 대안』이 출범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시대를 고민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어가는 거물뭉치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절실한 정치·사회적 구심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안정된 서민경제, 창의와 상상력이 샘솟는 미래사회, 소통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안정된 공동체, 더 넓어지는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첨부 2> 담론보고서

‘시민정치운동’ 과 ‘시민참여형 연합정치’ 를 위한 기본 구상

1.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정세와 새로운 정치 비전

□ 민주·민생·평화 위기의 원인

- **이명박 정부의 실정:** 권위주의적 통치 및 국민과 소통 부재, 친기득권·친부자·친재벌 사회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조정과 사회의식 변화, 양극화 및 고용불안정화, 부동산·교육·의료에서 공공성 약화

□ ‘희망의 정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와 공정성의 원리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정치
- 사회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충분한 기회와 안전을 많은 사람들

에게 제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창조

-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된 시민의식이 정치영역에서 발휘되는 **시민정치**
-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꿈과 이상, 창조와 도전의 열정을 지향하는 **가치정치**
- 소통과 연대, 분권과 자치의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 근거한 **생활정치**

2. 시민정치운동의 의의와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운동정치’와 ‘정당정치’, ‘대중의 참여행동’과 ‘대의제 정치’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약화되면서 제도정치·정당정치가 후퇴
- 제도정치·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통해 소통하고 시민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노력이 필요
- 최근 이는 ‘시민정치운동’, ‘시민주권’이라는 담론으로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음

□ 시민정치운동의 방향과 가능성

- 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특수한 발전경로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그에 입각한 실천의 조직화가 필요함
- ‘탈정치·반정치의 정치’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정치운동 모델을 개발해야 함
- 기성정치세력들이 메우지 못하고 있는 대안부재의 공간을 채워나갈 경우, 시민정치운동은 제도정치·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정치운동의 과제와 원칙

- 시민정치운동은 현 단계에서 바로 정치정당으로 발전하거나 정치정당의 지향을 밝히는 정치운동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운동임
- <과제 1> **대안 제시를 통한 국민의 힘 결집**: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함; 대안적 전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중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2> **시민사회 역량의 재구축**: 도덕성의 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제도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함; 특히 이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와 관련하여 중요
- <과제 3>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확대**: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역량 재구축을 위해 노선 및 정체성이 비슷한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준)정치그룹, 정치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함

3.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의미와 방향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연합정치란 ①선거 승리와 안정적 정부의 구성, ②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정당 및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행위를 말함
- 「희망과대안」이 구상하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현 시기 한국 사회의 기본 과제인 '민주·민생·평화 위기의 극복'에 공감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이를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연합정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의 다극화와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연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음
- 3당 합당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밀실에서 권력지분 협상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 기득권연합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DJP연합은 공개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결합을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짐; 하지만 DJP연합은 가치나 정책협약을 통해서보다는 상층 엘리트 간의 협상에 의존하였음
- 노무현-정몽준연합은 절차·내용 면에서 DJP연합의 긍정성과 한계를 공유했음; 정몽준의 연합파기에도 불구하고 호남-충청-개혁세력 간의 유권자연합이 작동했음
- 현 단계 연합정치에 대한 시사점: 선거연합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을 구성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하였음; 선거연합은 계속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진화 또한 거듭해 오고 있음; 선거연합(정치연합)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합의 내용적 강화와 연합참여의 보상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함

□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합정치의 필요성

- 최근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과 소수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형성 차원에서도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 ①국회의 자율성 제고, ②대통령제 본래의 정신에 맞는 삼권분립 강화, ③패권적 정당문화의 지양과 정당의 기능과 역할 증대
- 지난 시기 진보개혁세력의 분열과 파편화는 '민주주의적 실천의 부재'와 '정치역량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연합정치는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

- 첫째,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한국 사회 발전의 장기적 구도와 포괄적 틀, 예를 들면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에 기초하여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를 추진함
- 둘째, 시민정치운동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며, 선거연합의 경우에는 강력한 대중선거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선거 승리를 실현함
- 셋째,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주적 원리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치연합을 실현함

4. 2010지방선거전략과 「희망과대안」의 중장기 전망

□ 2010지방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 및 정치 정세

- 이명박 정권과 거대여당의 독주와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는 ‘정권견제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반면, 최근 정권견제론 부상 및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선거연합이 가능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국민들은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야당들의 선거연합에 기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

□ 지방선거전략의 기본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복원: 국민과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풀뿌리후보추천운동, 좋은후보추천운동, 선거참여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시민정치운동’의 토대 위에 ‘시민참여형 연합정치’ 추진: 현 단계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선거연합을 정당 및 정치세력에게 촉구하며, 유권자 참여운동을 통해 형성된 국민적 동력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함

□ 「희망과대안」의 중장기적 전망

- 중장기적으로 ‘이명박 정권 견제론’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과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